

검찰 자체감찰 강화 방안 마련

- 그동안 검찰은 감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.
- 이에 검찰은 “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정화 감찰 방안을 마련하라”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감찰권 행사 방식, 감찰 주체 및 대상 등 감찰 제도 전반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다음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 - 첫째, 비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원 면직 제한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,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사유 유무를 엄정하게 판단하겠습니다.
 - 둘째,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청구 수위를 심의하는 한편, 위원회에 비위대상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을 부여하여 실효적 심사 기능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.
 - 셋째, 변호사·변리사·회계사·감사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(감사원, 경찰, 국세청)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 영입하고, 내부 공모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감찰업무 경력자를

감찰부 과장으로 선발하여 감찰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.

- 넷째, 심야조사나 압수·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인권부와 정보를 공유하는 가운데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감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습니다.
 - 마지막으로, 법무부와 감찰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.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하는 한편, 감찰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공유를 확대하겠습니다.
-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검찰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감찰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찰 업무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·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☑